

팩트체크 + 보고서		 www.medianetwork.kr
2020-6주차	발행일: 2020년 2월 10일(월)	
연락처	(02) 741-7662 (유은실)	FAX (02) 741-7663
참여위원	박한명 이석우 조맹기 황우섭	

「미디어연대 팩트체크 + 보고서」

(2020-6주차)

- 대상 매체·프로그램 : 지상파방송 3사, 종편 4사, 보도채널 2사, 연합뉴스
- 대상 기간 : 2020년 2월 3일(월) ~ 2020년 2월 9일(일) 7일간
- 참여 위원 : 박한명 이석우 조맹기 황우섭
- 보고서 발표일 : 2020년 2월 10일

차 례

I. 정부만 대변하고 진실과 공정성 외면하는 KBS <뉴스 9>	2
II. 오로지 야당 비판 <MBC 뉴스데스크> - 여당·청와대는 보호, 변호, 옹호	4
III. 공익은 나몰라라, 정권 '방어'에 올인한 <JTBC 팩트체크>	7
IV. '우한폐렴 확산 우려' JTBC의 이중잣대	10
V. 추미애 장관의 위법성 공소장 비공개를 옹호하는 <연합뉴스>	11
VI. 미래한국당을 '위성정당'이라는 부적절한 방송보도	13
(참고의 말씀)	16

I. 정부만 대변하고 진실과 공정성 외면하는 KBS <뉴스 9>

1. 정국 현안 보도의 불공정성

○ 울산 시장 선거개입 보도 등한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32조

①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에 위배.

-검찰에서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에서 청와대 선거 개입이 확실시 되었다. 검찰의 공소장에서 청와대 VIP가 35번 언급이 되었다. 더욱이 공수처가 나오면서, 청와대를 위한 공수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KBS <뉴스 9>은 이 기사를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다. 범죄 사실을 직시한 검찰은 다루지 않고, 법무부 입장을 대변했다. KBS는 진실을 외면하고, 공정성 규칙을 어겼다.

-2020.02.04, < 법무부, '靑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제출 요구 사실상 거부>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75029>

- 2020.02.05, <추미애 “공소장 제출 않겠다” 재확인…“언론 유출 경위 파악”>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75743#>

-2020.02.07, <‘선거 개입 의혹’ 공소장 전문 보니…검찰, ‘대통령 중립성 요구’ 적시>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77448>

피의자 의견으로 검찰의 공소장이 물어 전부 거짓말이다. KBS는 검찰의 공소장을 신빙성 없는

것으로 보도.

2. 우한(武漢) 폐렴 보도에 대한 팩트체크

○ 정치 캠페인 형태의 우한 폐렴 보도.

-2020.02.03(15/31), 2020.02.04(15/31), 2020.02.05(14/30), 2020.02.06(15/29),

2020.02.07(11/31), 2020.02.08(12/19), 2020.02.09(/) 총 82/171.

-방송심의의 규정 제24조(재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재난 등의 상황: ②기상 상황 및 기상특보 발표 내용(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 등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그 밖에 재난 등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는데 필요한 사항- 직접 취재하여 방송하는 때에는 불명확한 정보를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우한 폐렴 보도는 재난보도로서 격이 떨어진다. KBS <뉴스 9>에서 호들갑 떨 내용이 아니라는 소리이다. 재난보도 개념을 잘 못 잡았다. 뉴스가 정확한 것일 이유가 없다. 보도 내용도 재산보도 일수록 인과관계를 따지는데, 이것은 원인 규명이 철저하지 못했다.

- 지난 사드 파동 때 거의 오지 않았던 여행객이 우한 폐렴 시기에는 중국 여행객 설 연휴 이후 28 만 명이 유입되었다. 일본, 캐나다, 미국과는 달리, 우리 정부는 여행 제한의 정부가 어떤 조치도 치하지 않았다. KBS <뉴스 9>는 전혀 비판이 없었다. 정부의 정책에 순치된 KBS보도 였다. 그렇다면 정치 캠페인 성격이 강함.

- 중앙일보 윤상언 기자(2020.02.07.). <‘신종 코로나 중증질환 아니다’ 국내 주치의들이 내

놓은 증거). 호들갑을 떠는 것이 아닌가? “오명돈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방지환 중앙감염 병운영센터장, 김남중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국내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을 분석한 결과 ‘병원 치료를 받으면 문제 없이 치료될만한, 중증도가 높이지 않은 질환’이라고 입을 모았다...다만 감염병이 퍼지는 속도는 빠른 편으로 추정했다.”라고 했다.

- <中 싱(邢海明) 대사 ‘中韓은 운명공동체, 여행제한 않은 WHO 따라야’>라고 했다. 이에 <뉴스 9>은 비판적 검토가 없이 주중 대사의 말을 전하는 수준. 2020.02.04, 신임 주한 중국 대사 이례적 기자회견...우회적 불만도>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74996#>

- WHO 사무총장은 친중파로 규명이 되었다. KBS <뉴스 9>은 그 사실을 보도 하지 않았다.

Ⅱ. 오로지 야당 비판 <MBC 뉴스데스크>

- 여당·청와대는 보호,변호,옹호

○ 주간 보도 일반기사(스포츠 기사 제외) 총 148건중

- 신종코로나 기사 : 94건(63.5%)

- 정국 기사 : 17건(11.7%)

- 청와대,여권 : 울산시장 선거 개입 공소장 기계적 중립 보도, 여권 발표 그대로 인용 등 옹호 일관.
- 야당 : 대부분 비판적, 일부 중립.
- 여권 비판 : 진중권 교수 발언등 일체 무 보도.

[2.3] 23건중 보도중 우한폐렴 기사 20건. 정국 기사 2건.

○ 미래한국당 대표 한선교...與 "이적 권유 황교안 고발"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657085_32524.html

○ (정참시) 김의겸 "몸부림쳤지만, 멈춰설 시간" / 면회 퇴짜에도...일편단심 박근혜? (김의겸,문석균-문희상 의장아들 모두 불출마.-모두 법적 문제는 없지만...옹호 보도. 박근혜는 법적문제 때문인가? 간략히 입장 전하며 처리하고 끝내. 야권은 폼뽕 조롱조 보도)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657086_32524.html

[2.4] 26건중 우한폐렴 17건, 정국 3건.

○ 檢 개혁 비판하며 사표낸 김웅...새보수당 영입 1호 (중립)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657460_32524.html

○ '종로 출마' 황교안 대신 김병준?...이정현 "내가 나간다" (머뭇 등 부정적 표현)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657461_32524.html

○ [정참시] "불법창당!" vs "창당방해!" / '의리'의 측근마저...이찬열의 배신?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657463_32524.html

[2.5] 27건중 우한폐렴 13건. 정국 3건

- 野 "뭐가 두려워 숨기나"…秋 "잘못된 관행 개선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657836_32524.html

- '미래한국당' 공식 창당…與 "참담한 정치 코미디" (절반을 비판에 할애. 원외 정당 미래당 항의소동 4문장이나. 여당 비판 강조 보도-코미디 개그 참담.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657837_32524.html

- (정참시) [정참시] "위성정당 아냐! 우린 자매정당!" / 종로 대진표…황교안 아니면 누가?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657843_32524.html

[2.6] 27건중 우한폐렴 15건. 정국 4건.

- 文 마스크 쓰고 경제 행보…보수신문 출신 대변인 기용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658237_32524.html

- "정무적 판단?…미루면 '나쁜 관행' 못 바꾼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658238_32524.html

"黃 대표만 양지로?"…'황교안 일병 구하기' 논란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658242_32524.html

- '안철수 신당' 이름 못 쓴다…선관위 '유권해석' (정봉주 2줄 갖다 붙여)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658243_32524.html

[2.7] 20건중 우한폐렴 14건, 우한 정국 1건.

- 黃 '장고' 끝 종로 출마…대선급 총선 경쟁 돌입 (중립. 짧게 기계적 처리. 그나마 이낙연 같이 언급. 비중상 맞지 않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658596_32524.html

[2.8] 12건중 우한폐렴 7건, 정국 1건.

- 정치권 이합집산…'550억 보조금'이 변수? (미래한국당 비판 주력)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658870_32524.html

[2.9] 13건중 우한폐렴 8건, 정국 3건.

○ 진천·아산 찾은 文 "경제 활동 위축 없어야" (정부 옹호)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659035_32524.html

○ 이낙연·황교안 동시 출격…"지역 공약" vs "정권 심판"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659036_32524.html

○ 불출마 선언한 유승민…한국당에 '신설합당' 최후통첩 (야당 부정적 보도)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659037_32524.html

Ⅲ. 공익은 나몰라라, 정권 '방어'에 올인한 JTBC 팩트체크

▶ 2020-02-3(월) [팩트체크] '피묻은 마스크'? '정책 때문에 마스크 못 판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32568&pDate=20200203

1. 방송내용 및 팩트체크

○ 2020.2.3.(월) JTBC <뉴스룸>의 “팩트체크” 코너

[앵커]

그리고 또 정부가 마스크업체 물량을 다 가져간 증거다라면서 한 판매업체의 문자메시지 캡처본이 이제 많이 퍼지기도 했잖아요.

... 그러니까 확인을 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기자]

우선 글쓰기가 언급한 제조공장, 제조업체에 직접 연락을 해 봤습니다.

정부가 우리 공장에 연락해 왔다는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된 문자와 글을 쓴 판매업체의 설명도 직접 들었습니다.

물량이 달리는 건 맞지만 정부가 가져갔다는 건 잘못된 정보로 확인됐다면서 소비자들에게 다시 안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하 생략)

○ 정부의 300만개 마스크 중국 지원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를 옹호하는 팩트체크를 시도했다. 시중에 도는 문자 내용대로 정부가 물량을 다 가져가지 않았다고 해도 언론은 국내 품귀 현상을 빚는 마스크 문제에 대해 정부 정책의 문제를 지적해야하는데도 오히려 이런 작은 해프닝 한 사례로 정부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막는 사실상의 방탄 보도를 했다.

▶ 2020-02-4(화) [팩트체크] 청와대가 '우한 폐렴' 못 쓰게 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32759&pDate=20200204

1. 방송내용 및 팩트체크

○ 2020.2.4.(화) JTBC <뉴스룸>의 “팩트체크” 코너

○ 일각에서 우한 폐렴 용어를 청와대가 못 쓰게 했다는 주장 및 보도에 대한 반박 차원의 청와대 방탄 기사. 요컨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용어는 WHO의 공식 명칭이라 따랐을 뿐 정부가 중국 눈치를 봐서 용어를 못 쓰게 한 게 아니라는 보도내용이다. 그러나 2019년 유행한 일본 뇌염,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현 정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용어 그대로 사용해 중국 눈치보기가 아니라는 정부 주장은 거짓 또는 변명에 불과한데도 뉴스룸은 청와대

와 정부 주장을 그대로 사실이라며 팩트체킹을 시도했다. 또 WHO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잠정적인 명칭에 불과하다. 2015년 메르스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한 종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에게도 쉽고 더욱 정확한 용어는 우한 폐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앞장서서 우한 폐렴 대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용어를 권장, 확산하는 것은 강제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뉴스룸의 팩트체크는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 2020-02-5(수) [팩트체크] ② 격리 중 우한 교민, 공용세탁실 쓴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32961&pDate=20200205

1. 방송내용 및 팩트체크

○ 2020.2.5.(수) JTBC <뉴스룸>의 “팩트체크” 코너

○ 충남 아산에서 격리 생활 중인 우한 교민들이 "공용세탁실을 쓰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한 팩트체킹을 시도했다. 요컨대 교민들이 공용세탁실을 쓰고 있다는 보도는 거짓이란 내용이다. 뉴스룸은 정부에 불리할 수 있는 이슈를 찾아 발 빠르게 팩트체킹하며 정권 보호에 나서지만 정부의 거짓말이나 의혹에 대해서는 팩트체킹을 시도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 2020-02-6(목) [팩트체크] 중국인 감염자 치료 때문에 내 건보료 오른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33196&pDate=20200206

1. 방송내용 및 팩트체크

○ 2020.2.6.(목) JTBC <뉴스룸>의 “팩트체크” 코너

국내 1번 확진자, 중국 여성 오늘 퇴원

*'무상 치료'가 알려지며 나오는 반응은...
"건보료 또 오르겠네"*

*외국인 감염자 치료해주면 건보료 오를까?
... (생략)*

○ 외국인 감염자에 대한 치료비용을 건보료에서 감당하지 않고 다른 국고재정에서 지출한다는 내용의 팩트체킹. 외국인 감염자 무상치료가 건보료 인상과 상관없다는 것은 지난 메르스 치료비로 나간 돈이 118억으로, 당해 건보료 지출 48조원의 0.02% 수준임을 근거로 제

시했다. 그러나 현재 바이러스 확산 중으로 정확한 통계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우한 폐렴이 건보료 인상 및 재정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식으로 단정하는 것도 성급한 보도다. 그럼에도 이러한 보도가 나오는 것은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에 나서지 않고 사실상 방치해 국내 확산 가능성이 현존하는데도 건보료 인상이 있을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차단함으로써 문재인 정권에 대한 여론 악화를 사전에 막는 뉴스룸의 정권 보호 방탄용 기사에 불과하다.

Ⅳ. '우한폐렴 확산 우려' JTBC의 이중잣대

▶ 2020-02-8(토) 도심서 또 대규모 주말집회…"금지해야" 국민청원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33514&pDate=20200208

1. 방송내용 및 팩트체크

-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커지는 상황인데요. 서울 도심에선 지난주에 이어 보수 성향 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또 열렸습니다. 국민들 시선이 곱지 않은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라도 도심 집회가 열리는 것을 막아달라는 국민 청원도 올라왔습니다. (이하 생략)

- 이미 전국으로 확산되어 후베이성 입국 금지조치가 사실상 의미가 없는 우한 폐렴 진원지 중국인 입국은 방치하면서 자국민 반정부 집회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은 보도하는 편파적 태도를 보였다. 뉴스룸은 중국인 입국금지 청원에 수십만 명이 서명할 때까지도 보도하지 않다가 청와대가 후베이성 입국금지조치를 하자 그때서야 비로소 돌변해 이 문제를 보도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팩트체크> "중국인 입국 금지로 감염병 막자" 현실성 있나> 등의 리포트로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 여론을 억누르더니 우한 폐렴 확산이 걱정된다며 318명이 서명한 주말집회 금지청원은 보도했다. 우한 폐렴을 핑계로 문재인 정권 반대 집회를 무산시키려는 정권 방탄용 보도다.

V. 추미애 장관의 위법성 공소장 비공개를 옹호하는 연합뉴스

- 지난 한 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독선과 탈법으로 논란이 끊임없이 지속된 기간이었다. 청와대 하명 수사과 선거 개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와대 전·현직 비서관과 울산 시장 등 13명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을 보내라는 국회의 요구를 추 장관이 멋대로 거부한 게 발단이다. 추 장관이 정작 본인은 같은 장관급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기 명령을 거부했다며 검찰권 운운해 놓고 신임 검사들에게는 “상명하복 박차고 나가라”고 선동한 자기모순도 논란거리였다. 연합뉴스는 그러나 이들 사안에 대해 균형 있는 보도가 아니라 추 장관의 대변인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 추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요구를 6일 동안이나 묵살하고 있다가 마지못해 A4용지 71쪽짜리 검찰 공소장 대신 4쪽짜리 요지만 보냈다. 연합뉴스는 2월 4일 18:52와 19:53에 각각 송고한 <법무부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공개 거부…요지만 제공>과 <법무부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 공개 거부(종합)>에서 ‘당사자들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같은 법무부의 일방적 논리만 잔뜩 늘어났을 뿐 관행에 어긋나고 위법 소지도 있다는 사실은 언급조차 안 했다. 장문의 종합 기사 말미에 “국민의 알 권리를 크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의 발언과 “반드시 법무부를 거쳐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검사장 출신 변호사의 논평을 덧붙인 게 전부다.

- 연합뉴스는 이튿날인 5일 09:41에 내보낸 <추미애 “공소장 공개는 잘못된 관행…언론 유출 경위 확인할 것”>에서도 “잘못된 관행이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추 장관의 일방적 주장만 다뤘을 뿐이고 ‘국민의 알 권리 외면’, ‘총선 끝날 때까지 묻어 두려는 술책’ 등 다른 매체들의 보도에는 눈을 감았다. 내부 숙의를 거쳤다는 추 장관의 주장과 달리 담당 부서인 법무부 검찰국 공공형사과가 직권 남용 소지와 그동안의 관행을 들어 비공개 반대 보고서를 제출했는데도 추 장관이 “내가 책임지겠다”며 비공개를 강행한 배경도 묵살한 반쪽짜리 보도였다. 탄핵 정국 때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이 여러 차례에 걸쳐 검찰 공소장을 조목조목 읽어 내려가며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맹비난한 것과 비교하면 내로남불의 전형이며 불법을 저지른 권력 실세들의 사생활과 명예 보호가 국민의 알 권리에 우선할 수 없다는 지적도 끝내 외면했다.

- 연합뉴스는 야권은 물론이고 친(親)정권 시민단체의 대표격인 참여연대와 범여권에 속하는 정의당, 대안신당 등이 잇따라 추 장관의 비공개 조치를 비난하자 하루가 지나서야 마지못해 정치부 스트레이트로 다루고 ‘연합시론’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비공개…명분도 실익도 없다>(02-05 14:23)를 내보냈으나 추 장관의 독선에 따른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기보다는 사안의 초점을 최대한 흐리면서 정부 입장 대변에만 매달렸다. 연합뉴스 <법무부 “공소장 공개는 법원 권한”…추미애 “정치적 부담 감내”(종합)>(02-05 17:24), <추미애, 공소장 비공개 논란 직접 해명…“국정농단 때와 달라”>(02-06 14:21), <팩트체크> 법무장관 공소장 비공개 논란…관행과 규정은?>(02-06 18:28), <‘검찰개혁위’ 김용민 “공소장 비공개, 제도적 고착화 필요”>(02-07 12:08)에서도 일관되게 편파 보도 행태를 되풀이했다.

- “미국도 공소장 전부 공개 안 한다”…법무부 연일 해명>(02-07 17:14) 역시 미국도 재판

전까지는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추 장관의 주장이 거짓이란 다른 매체들의 보도를 묵살하고 법무부의 일방적인 해명을 고스란히 전달했을 뿐이다. 기사 중간에 [일부 언론은 홈페이지에 '올라온 형사사건 보도자료와 공소장을 제시하면서 '미국 법무부는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의 경우 기소 직후 공소장을 공개한다'는 취지로 보도했다]고 밝히기는 했으나 그마저도 사실과 동떨어진 면피성 끼워 넣기였을 뿐이다.

- 연합이 공소장 비공개 사태 직전에 빚어진 '검사동일체 원칙' 논란과 관련해 내보낸 <추미애 "상명하복 문화 벗어나라" 신임 검사들에 당부(종합2보)>(02/03 18:08)와 <'검사동일체' 놓고 법무부-검찰 신경전... "폐지됐다" vs "아니다">(02/04 16:10)도 집요한 취재와 공정한 논평을 외면하고 철저한 받아쓰기로 일관했다. 추 장관은 신임 검사들에게 '검사동일체 원칙'이 15년 전에 폐기됐다며 "상명하복으르 박차고 나가라"며 사실상 윤 총장에게 항명하라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추 장관 본인은 공소장 비공개 사태에서 부하직원들의 반대 의견을 묵살했다는 사실은 외면했다. 추 장관이 검사들보고는 총장에게 대들라고 하면서 자기는 같은 장관급은 검찰총장에게 "내 명을 거역했다"는 사극투의 시대착오적 언사를 구사한 전력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상명하복 벗어나라면서 지휘감독권 강조한 추미애>(서울경제), <"상명하복 박차고 나가라"는 秋법무, 항명 부추기나>(세계) 등 다른 매체들이 확연하게 차이나는 시각으로 보도하자 하루가 지난 뒤 '신경전' 운운하며 사태를 흐리면서도 일방적인 정부 홍보에 치우쳤다.

- 국가기간통신사 연합의 편파 보도는 하루빨리 종식시켜야 한다. 다가오는 총선에서도 큰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너나없이 감시의 눈을 부릅뜨고 연합의 반민주적 보도 행태에 끊임없이 경종을 울려야 한다.

Ⅵ. 미래한국당을 '위성정당'이라고 표현한 방송보도는 부적절

- ▶ 2020.02.03~2020.02.06 지상파, 보도전문채널, 종합편성채널 메인뉴스의 '미래한국당' 창당 관련 보도의 비교분석

1. 보도내용

- ▶ KBS <뉴스9>'미래한국당' 대표에 한선교...통합신당 당명 정한다(2.3)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74247>
- ▶ 한국당과 닮은 듯 다른 '미래한국당'...창당대회 가보니(2.5)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75745>
- ▶ MBC <뉴스데스크> '미래한국당' 공식 창당...與 "참담한 정치 코미디"(2.5)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657837_32524.html
- ▶ MBC <뉴스데스크> [정참시] "위성정당 아냐! 우린 자매정당!"(2.5)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657843_32524.html
- ▶ SBS <뉴스8> 미래한국당 "자유한국당과 한 몸" 강조...현역 의원 확보는?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635969&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openPrintPopup
- ▶ 연합뉴스TV 한국당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공식 출범...민주당도 만들까(2.5)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00205021100038>
- ▶ YTN 한국당 위성정당 출범..."쓰레기·밀회 정당" 맹비난(2.5)
https://www.ytn.co.kr/_ln/0101_202002052236579240
- ▶ TV조선 <뉴스9> 기호 3번 목표 '미래한국당' 창당...위법 논란·부정 여론 돌파할까 (2.5)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05/2020020590130.html
- ▶ JTBC <뉴스룸> 논란의 미래한국당 출범...5명 채워 '보조금' 받을 계획(2.5)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32972&pDate=20200205
- ▶ 채널A <뉴스A> [순간포착] 미래한국당에 미래당 난입...“가짜정당!”(2.6)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87853
- ▶ MBN <종합뉴스> 출마 '설왕설래'에 '불쾌감' 드러낸 황교안...현역 4명, 미래한국당으로(2.5)
<http://www.mbn.co.kr/vod/programView/1234726>

이상의 9개 방송사 미래한국당 창당 관련 11개 보도의 '위성정당'과 '비판용어' 사용

내역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구분	방송사	‘위성정당’ 용어 사용	‘비판용어’ 그대로 전함	공적매체
지상파	KBS	○○	○○	○
	MBC	○○	○○	○
	SBS		○	
보도전문 채널	연합뉴스TV	○	○	○
	YTN	○	○	
종합편성 채널	TV조선		○	
	JTBC		○	
	채널A		○	
	MBN	○	○	

2. 팩트체크

- 2월 5일 미래한국당 창당 관련 지상파 3사, 뉴스전문채널 2사, 종합편성채널 4사의 총 9개 방송사 메인뉴스 11개를 분석한 결과 지상파 2사, 뉴스전문채널 2사, 종편채널 1사의 총 7개 보도가 미래한국당을 ‘위성정당’이라고 보도했다.
 - 특히, MBC는 미래한국당을 ‘자유한국당의 위성 정당’이라고 보도하고, 우리 정치사에서 유례가 없는 위성 정당 창당에 대해서 다른 당들은 "부끄러운 정치 코미디"라고 일제히 비난했다고 보도했다.
 - MBC는 리포트에 이어 [정참시] 코너에서 다른 기자가 스튜디오에 출연하여 미래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자매정당’이 아니라 ‘위성정당’임이 뻔히 예상된다면서 공천과정에서 뜨거운 쟁점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 미래한국당을 ‘위성정당’이라고 보도하지 않은 지상파 1사, 종편채널 3사의 총 4개사 보도도 미래한국당을 비판하는 정당 관계자의 의견을 전하면서 ‘위성정당’, ‘위장정당’, ‘가짜정당’, ‘꼼수정당’ 등의 비판용어를 그대로 보도했다.
- 미래한국당이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이라면 자유한국당 주변을 돌고 따라다니는 부수적인 존재 느낌이 있는 반면, 자매정당이라면 비교적 독립적인 존재란 느낌이 드는데, 사실보도 형식에서 ‘위성정당’이라고 단정하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 특히, KBS, MBC, 연합뉴스TV는 공적매체로서 ‘방송의 공적책임’의 본분을 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KBS와 MBS는 지상파 방송으로서 ‘차별·편견·갈등을 조장해서는 안된다’는 ‘사회통합의 책임’까지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 방송매체에서 특정 정당을 ‘위성정당’이라고 단정하는 보도는 선거 관련 심의규정을 넘어 특정 단체를 희화화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언어이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방송의 품격’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 미디어가 인식 관련 용어들을 부정확하고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단기적으로 특정 단체에 왜곡된 인식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그 나라 국민의 사회인식과 사유에 혼란을 주게 된다는 점에서 미디어의 각성이 요구된다.
- 특히, 선거기간에는 모든 방송매체가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외에 <방송법>, <선거법>,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관련 법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관련규정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 제9조(공정성) ②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방송하여야 한다.
 - 제12조(정치인 출연 및 선거방송) ①방송은 정치와 공직선거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②방송은 정치문제를 다룰 때에는 특정 정당이나 정파의 이익이나 입장에 편향되어서는 아니된다.
-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 제5조(공정성) ②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의 배열과 그 내용의 구성에 있어서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6조(형평성) ②방송은 선거방송에서 후보자와 정당에 대하여 실질적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공평한 관심과 처우를 제공하여야 한다. 끝.

※참고 : 이 보고서는 미디어연대의 분석자료입니다. 자유롭게 활용하시되, 인용시 '미디어연대 자료'임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후원 : 저희 미디어연대와 함께 해주십시오. 후원해주신 분들에게는 미디어연대 <팩트체크+ (플러스) 보고서>를 보내드립니다. 후원은 미디어연대 홈페이지(www.medianetwork.kr)에서 '후원하기'를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